

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 점검... “사고유발 요소 개선”

2025년 업무계획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무관용’ 대응 소비자보호조사국 신설... 현장 점검이 원장 “남은 임기 거시적담론 집중”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금융사고, 부당대출, 불완전판매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건은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균건한 금융시스템(안정)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신뢰) ▲국민과 동반성장(상생) ▲혁신기반 조성(미래) ▲내적쇄신 지속(쇄신) 등 5대



이복현 금감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략과 1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PF·기업부채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AI·디지털 금융 혁신, 가상자산 규제 정비, 내부통제 및 감독 프로세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

통제 체계의 구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부당대출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

해, 은행·금융지주의 편법·우회 여신을 집중 점검하고 자본비율 정합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사회와 감사·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 관행 원칙을 평가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작동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민원조사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신설해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압행 기동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성과보수 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권이 성과에만 집착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적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성과보수 체계 개선이 금융사고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기 실적 중심

의 성과평가지표(KPI) 개편과 성과보수 유보·재산정 기준 정비를 통해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유발 요소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과보수와 책임이 부합하는 보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AI 및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지원 확대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대출 관리 강화 ▲가상자산시장 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제와 발급 허용 등을 추진한다.

한편 오는 6월 퇴임 예정인 이원장은 4개월여 남은 임기 중에는 금융사들이 성장하기 위한 ‘거시적인 담론’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임기 이후 행보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업권 간담회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소통하겠다”며 “당국이 가진 문제를 같이 호흡하도록 간곡히 설득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지난해 국세수입 336.5조... 예산 대비 30조 덜 걷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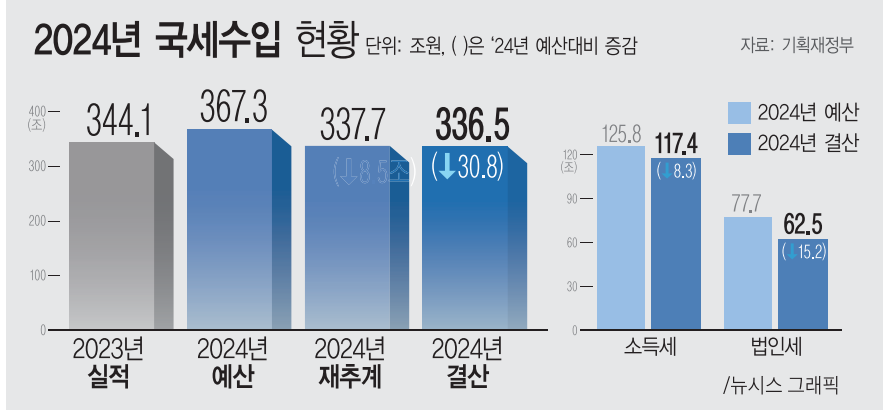
기재부, 2024 회계연도 실적 확정 총세입 535.9조, 총세출 529.5조 집계 경기둔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영향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국세가 당초 예산에 크게 미달했다. 30조 원이나 덜 걷혔다. 재작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또다시 큰 규모의 이른바 ‘세수펄크’가 되풀이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회계연도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3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세입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550조 원)보다 14조1000억 원 적었다.

총 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예산(367조3000억 원)과 비교해 30조8000억 원 덜 걷힌 규모다. 2023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



규모 세수결손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7조5000억 원이나 줄었다.

경기 둔화를 비롯해 자산시장 부진 등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법인세가 예산 대비 15조2000억 원 덜 걷혔다. 또 소득세(-8조3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조9000억 원), 관세(-1조9000억 원), 개별소비세(-1조5000억 원), 교육세(-7000억 원),

증권거래세(-6000억 원) 등도 목표치에 미달했다. 반면 상속증여세(6000억 원)와 부가가치세(8000억 원)는 예상치를 초과했다.

각종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이자수 등 세금을 제외한 정부 수입을 뜻하는 세외수입이 부족한 세수를 일정 부분 메웠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 원으로 예산(182조7000억 원)보다 16조7000억 원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신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2023년도(전년) 경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집행한 총액을 뜻하는 총 세출은 52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지출액이 435조4000억 원, 특별회계 지출액이 94조 원이었다. 정부가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한 정도를 뜻하는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 원이었다. 불용액은 한 해 지출 가능한 전체 규모(예산현액)에서 총 세출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재작년(45조7000억 원)에 비해서는 불용 규모가 줄었다.

김윤상 기재부 제2 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울 아파트 매매 감소 상승거래 비중 36.9%

구축 중소형 면적 위주 거래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36.9%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부터 상승거래비중은 50.3%, 52.1%, 52.5%로 3개월 연속 50%를 넘겼지만 절반 밑으로 떨어진 작년 9월(48.5%) 이후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금천구(66.7%)와 노원구(55.7%)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축 중소형 면적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으나 대부분 종전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면서 하락 거래가 전체 비중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및 지방에서는 하락거래 비중이 상승거래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하락거래비중은 2024년 12월 43.4%로 상승거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지난 달에도 43.6%로 집계됐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하락거래 비중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시 수정구(61.5%) ▲이천시(61.1%) ▲안산시 상록구(61.0%) ▲동두천시(60.0%) ▲의왕시(55.9%) 등에서 1월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종전 가격보다 낮게 거래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과 서울 외곽 지역은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인데 금리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이 조정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정국불안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 경기하방 위험 커져”

KDI 2월 경제동향

“제조업 개선에도 건설업 부진이 발목”

12·3 사태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또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KDI는 “정국 불안의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되었으나 건설업 부진에 기인해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도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부문에선 건설 쪽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조업 일수 확대, 광공업 개선에도 건설업 부진으로 전년 동월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수 역시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했다. 설상가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하며 우리 경제를 옥죄는 모습이다.

KDI는 “정국 불안으로 12월 중 급락한 가계와 기업 심리 지표가 1월에도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짚었다. 또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함에 따라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금리 기조 속에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 심리 위축으로 소비 역시 부진한 흐름이라고 봤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의복, 차량 연료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

월 대비 3.3% 줄었다. 서비스 소비 역시 주요 업종에서 감소세가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년동월 대비 13.1% 증가, 회복세를 지속했다. KDI는 “선행 지표도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의 또 다른 축인 건설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건축부문과 토목부문에서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며 전년동월 대비 8.3%나 감소했다. 이에 연구원측은 “최근 주택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거나 건설수주 등의 선행지표 개선세는 유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